

KBA WEEKLY BRIEFING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2023.01.30 - 02.03

VOL.346



KBA Europe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CONTENTS

I EU TRADE POLICY

- ▶01.30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 ▶01.30 EU 사법담당 집행위원,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 부과 강조
- ▶01.31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 ▶01.31 EU 일부 회원국, 보조금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 표명
- ▶02.01 EU 집행위, 美 IRA법 대응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 ▶02.01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공급망실사 대상에 인권 및 환경 이외에 '기후' 포함 추진
- ▶02.02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 ▶02.02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 ▶02.03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 ▶02.03 EU 집행위,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이후 시행 전망

① 네덜란드-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對중국 수출통제 합의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사인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는 27일(금) 미국의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

- 미국은 작년 10월 자국 기업의 對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 이에 일부 중요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이 동참의사를 표명한 반면, 네덜란드는 ASML의 수출 및 장기적 전략에 대한 영향을 우려, 신중한 태도를 견지
- 미국은 네덜란드에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를 압박, 이번 협상을 통해 네덜란드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합의된 수출통제가 실제로 시행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반도체 제조장비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및 전략적 중요성의 정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짐
 - * 반도체 업계는 한 자릿수 나노미터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로 간주, EUV 장비가 이의 생산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DUV 장비도 별도 기술과 접목되면 첨단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
-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동참하는 형식인 점에서 수출통제 제도를 공동으로 조율하고 있는 EU 회원국 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

●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의 승인 불허로 對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 외 일부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 수출도 제한될 전망

- ASML 매출 중 對중국 수출은 전체의 18%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 주문이 ASML 생산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ASML의 매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
- ASML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출통제이나 첨단 장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7일(금) 對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미 EU-미국 간 이와 관련한 정책 조율이 존재한다고 언급

② EU 사법담당 집행위원,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 부과 강조

●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27일(금) EU의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EU 집행위는 작년 2월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에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실사, 위험 완화 및 구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CSDDD 지침안을 제안
- 집행위 지침안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연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과 섬유섹터 등 이른바 고위험 섹터 가운데 '종업원 수 250명 이상 및 연 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지침 적용 대상으로 규정
- 또한, 은행 및 투자기관 등 금융서비스 기업도 기업과의 계약에 앞서 사전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 지침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
- 이에 대해 EU 이사회는 작년 12월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로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의무 부과 여부를 각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 관련 이사회 입장으로 확정
- 또한, 기업의 실사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으로 수정, 기업의 가치사슬 다운스트림의 제한적 부분만을 실사범위로 규정, 금융기관의 실사의무도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전망
- 이에 대해,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지침의 용어보다는 지침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이 중요하며, EU 이사회가 금융기관을 사실상 실사 대상에서 제외하려 할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지난주 유럽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표결 확정된 가운데 경제통화위원회(ECON)도 금융기관을 실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장을 채택
- 시민사회단체 등도 금융기관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 금융기관을 지침의 실사의무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지침 적용 대상과 관련, EU 이사회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주장,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우선 지침을 적용한 후 향후 5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이사회 입장으로 채택
- 반면, 경제통화위원회는 '종업원 수 250명 및 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과 '고위험 섹터 가운데 종업원 수 50명 이상 및 매출액 1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를 요구
-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프랑스와 독일 공급망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이 각각 종업원 수 5000명과 30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지침안은 보다 광범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조
- 한편, 레인더스 집행위원은 유럽의회가 조속하게 지침 관련 입장을 확정, 6월 만료되는 EU 이사회 스웨덴 의장국 임기 중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의(Trilogue)를 개시하고, 12월 스페인 임기 이내 법안 확정을 기대한다고 언급

③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

-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
-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GSP 특혜와 난민문제 연계

-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

*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

-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으나, 최근 수립한 우파 정부가 난민문제 해결을 강조,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를 강력하게 주장
- 또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도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배경으로 난민 인정이 거부된 자의 본국송환과 GSP 특혜 연계에 찬성하는 상황
- 이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GSP의 본래 목적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지원과 인권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난민 송환과 GSP 혜택의 연계를 비판
-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난민문제 등 대외안보 목적과 GSP와 같은 통상정책의 연계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GSP제도의 당초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은 통상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면 통상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
- 한편, 독일의 경우 연립정부 내부적인 이견으로 GSP 개정 관련 EU 이사회 협상 권한 위임 표결에 기권한 바 있음

● [쌀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 GSP 개정 관련 또 다른 중요 쟁점은 GSP 적용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가 쌀 및 설탕 등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또는 방글라데시 등 GSP 적용 국가에서 저가 농산물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우려,
- 특정국에서 쌀 등 농산물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GSP 적용 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
-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EU 집행위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

④ EU 일부 회원국, 보조금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 표명

● EU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금 제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이 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 EU 집행위는 금주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보조금제도로 인한 역내 기업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EU 보조금제도 간소화 및 회원국 간 공정한 보조금 접근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계획 등을 담은 산업정책을 제안할 예정
- 한 EU 외교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에 이미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 보조금 규제 완화로 EU 단일시장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 회원국 간 공정한 보조금 접근을 위한 유럽국부펀드 조성 계획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회원국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찬성하도록 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
-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초안에는 모든 회원국의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EU 공동부채를 통한 기금조성 계획이 담겨 있으나, 최근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에서 다수 회원국이 해당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
- 또 다른 EU 외교관계자는 정상회의 초안에 보조금 규제 완화, EU 차원의 제조업 생산목표 및 긴급 국부펀드 도입 등을 요구한 프랑스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비판

●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은 보조금 규제 완화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에 따른 단일시장 균열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

- 특히, 지난주 핀란드,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는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에서 美 IRA법 대응을 위한 상시적이고 섹터를 특정하지 않은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이탈리아는 현행 위기 대응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77%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된 점을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회원국 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한편, EU 집행위는 31일(화) 회원국에 전달한 산업정책 개편안 초안에서 새로운 부채 발행보다는 EU 기존 기금 및 REPowerEU 기금 등의 전용을 선호한다고 언급

- 또한, 보다 광범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안정화 기금 SURE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
- 이에 대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IRA법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기금 전용 또는 SURE 기금 확대 등에 비판적 입장

⑤ EU 집행위, 美 IRA법 대응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 EU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제안

- 집행위는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앞서 동 제안을 담은 통신문을 발표, 2030년까지 새로운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 설정,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유럽국부펀드' 창설 등을 담은 친환경 산업계획을 제시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 집행위는 새로운 친환경 산업계획의 핵심으로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 2030년까지 EU 차원의 야심 찬 친환경 제조업 생산 역량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 특히, 3월 8일 발표될 '핵심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으로 역내 채굴 등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추진, 탄소중립산업법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며, EU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로그램(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 미국 등 제3국의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 EU 역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타깃형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규정을 정비,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
-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조업 공정의 탈탄소화 관련 보조금 지원을 간소화하고, 특정 탄소중립 섹터에 대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특정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고 기준을 완화
- 또한, 중기적인 계획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업,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이른바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창설을 올여름 제안할 예정

- 유럽국부펀드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 EU 예산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유지하고, 기존 REPowerEU 관련 자금과 기타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 다만,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새로운 EU 공동 부채 발행 등은 언급하지 않음

●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 확대

- 공정 경쟁 및 자유무역의 원칙하에 EU의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협력 체제를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
- '청정기술/탄소중립산업파트너십(Clean Tech/Net-zero Industrial Partnerships)'을 확대하고, 제3국과 이른바 '핵심광물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을 결성, EU의 친환경 전환에 필수 핵심 광물의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공급망을 확보할 방침
- 이와 관련,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2023년 중반까지 호주와의 관련 협정 체결 추진 계획을 제시

● 기술 인재 역량 강화

-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이른바 '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Net-Zero Industry Academies)'를 설립, 이를 통해 전략sect에 필요한 고임금 기술인력을 배출

● 한편, 이번 제안은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앞서 프랑스는 EU 차원의 친환경 제조업 생산목표 도입, 보조금 규제 완화, 긴급 국부펀드 창설 및 무역구제조치 활용 강화를 주장하는 등 IRA법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
- 반면, 핀란드,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및 슬로바키아 등은 지난주 EU 집행위에 대해 상설 또는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⑥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공급망실사 대상에 인권 및 환경 이외에 '기후' 포함 추진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실사대상에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짐

- 환경위원회는 2월 9일 표결을 통해 지침안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위원회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과 함께 '기후(climate)'를 포함할 방침

- 이는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완화 노력 등으로 실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위 지침안이 실사 대상을 인권과 환경으로 제한한 것보다 실사 대상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
- 환경위원회의 유럽의회 최대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사 대상에 '기후'를 포함한 타협안이 환경위원회 입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

⑦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
 -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 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
 -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원 격차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의 우려가 제기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일(수) 지난 3년간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급 보조금 체제하에서 지급된 보조금의 약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되었다며 회원국 간 보조금 지급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이와 관련,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은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보조금 규제 완화로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EU 단일시장의 균열 및 지역발전 악화 및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
- 한편, 일각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IRA법이 EU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는 감정적인 우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조치에 그쳐야 하며,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은 불필요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⑧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
 -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
 -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
 -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됨
 -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
 -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접근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수리, 업데이트를 위한 제3자와의 데이터 공유에 관한 내용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1일(수) 디지털유럽(DigitalEurope),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 유럽기술연맹(European Tech Alliance) 등 30개 업계단체는 데이터법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
 - 업계는 경제 위기 및 기록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추가적인 불확실성 보다 시장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 데이터법 도입에 앞서 실제 시장조건에서 법안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기업의 데이터 공유에 있어 영업비밀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안전장치가 실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지적
 - 특히, 공유 대상 데이터 종류 및 소비자 또는 기업 등 공유 대상자에 따른 차이 등과 관련한 법적 명확성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외에도 업계는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 클라우드 채택 촉진,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보장,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 및 보상 등의 협상에 대한 자율권 등도 요구

- 집행위 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공유의 경우 기술적 비용 이외 보상은 청구할 수 없음. 또한, 데이터 공유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데이터 공유 계약에 대한 이른바 '공정성 검사(Fairness Check)'를 규정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의 기술적 비용 및 보상과 관련하여 규정된 이른바 '공정성 검사(fairness check)'를 모든 데이터 공유 계약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⑨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 2일(목) 자로 수정된 EU 정상회의(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강조

- 앞서 EU 집행위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

- 이를 통해 EU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산업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신속 및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

-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수정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은 보조금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한시적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 이는 수정 전 초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

- [SURE 프로그램 확대 삭제] 수정 초안은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 19 등 위기 상황 하의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인 이른바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

- 수정전 초안은 SURE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회원국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 것으로, 독일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한 것이 배경

- [유럽국부펀드] 초안은 유럽국부펀드와 관련, '집행위의 신속한 유럽국부펀드 제안을 기대한다'는 언급을 '집행위의 2023년 여름 전 유럽국부펀드 제안 의도(intention)에 주목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수정

- 한편, 2일(목)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및 슬로바키아가 EU 역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는 등 EU 회원국의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

- 이에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부 및 중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⑩ EU 집행위, 내연기관 대형차량 CO2 배출 금지 2040년 이후 시행 전망

- EU 집행위가 2월 14일(화) 발표할 '대형차량 이산화탄소(CO2) 배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
 - EU는 작년 말 2035년부터 승용차와 밴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반면, 대형차량 (heavy duty vehicles)은 대상에서 제외
 - 이에 집행위는 탱크로리, 트랙터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4일(화) 발표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동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금지는 2040년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
 - 구체적으로 초안은 대형차량의 2025~2029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기존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2030~2034', '2035~2039' 및 '2040년 이후' 등 세 개의 보고기간(reporting periods)을 규정하고, 향후 각각의 기간 중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대형차량에 대한 CO2 배출 완전 금지를 통한 사실상 내연기관 대형차량 판매 금지도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또한, 개정안 초안은 도시버스 제조사에 대해 향후 확정될 최소 비율 이상의 무탄소배출 차량 판매 의무를 부과
-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유럽의 화물차 평균수명이 18년 정도임을 고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대형차량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머스크 해운, 유니레버 등 대기업도 이에 동조
 - 반면,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2025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한 CO2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술성숙도 및 기술 보급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강조, 개정안 초안이 2029년까지 CO2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것에 안도
- 한편, VDA는 유럽 전역의 배터리 및 수소 연료 차량을 위한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대형차량 CO2 규제의 필수 전제조건이나, 현재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
 - EU 역내 배터리 및 수소 충전망 구축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현재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해 협상 중인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나, EU 이사회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충전소 건설 목표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